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정치 리스크의 경제 리스크화

목 차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정치 리스크의 경제 리스크화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여건 전망	9
3. 2017년 수정 경제 전망	11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17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제연구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외 6명

Executive Summary

□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한국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정치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침체 강도는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동안 성장을 견인하던 건설 부문도 경기가 크게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가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다만 수출 부문에 일부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 2017년 수정 전망의 배경

(예상치 못했던 정치 리스크 발생) 2016년 9월(현대경제연구원 기존 전망시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국내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 정치 리스크의 불안정성은 그 파급영향이 거대하여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정책 당국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되어 보인다.

(내수의 회복 모멘텀 실종)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 9월(기존 전망 시점)에 2017년 한국 경제를 전망할 당시에는 국내 경제 주체 심리는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정책적인 대응 여하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심리의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관리 중심으로 선회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를 버텨왔던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내수경기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

■ 2017년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경제성장률)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수 경기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016.9월 전망) 2.6%에서 0.3%p 하향조정된 2.3%를 제시한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건설투자)** 시장 안정화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SOC 투자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되면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5%로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대내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제약되었으나, 수출 확대에 의해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거래)** 2017년 수출은 4.8%, 수입은 7.4%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편 무역수지 약 835억 달러, 경상수지 약 83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 2017년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연관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더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2017년 국내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화 가치 하락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 국내 수요 부진 확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될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심리적 요인이 그 불황의 상당한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응방안) 민간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여 장기 불황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은 선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가는 적응적 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 **셋째**, 소비진작책의 정확한 타기팅과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차단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일곱째**, 미래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한국 경제 전망표(2016.12)>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6	3.0	2.0	2.5	2.0	2.6	2.3
	민간소비 (%)	2.2	2.7	1.9	2.3	1.6	2.0	1.8
계정	건설투자 (%)	3.9	10.3	4.8	7.3	3.1	1.9	2.5
	설비투자 (%)	5.3	△3.6	△1.5	△2.5	2.6	1.4	2.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59	517	433	950	420	410	830
	무역수지 (억 달러)	903	482	417	899	435	400	835
거래	수출증가율 (%)	△8.0	△10.2	△1.7	△6.0	6.1	3.5	4.8
	수입증가율 (%)	△16.9	△13.1	△1.0	△7.2	10.0	5.0	7.4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9	0.8	0.9	1.5	1.4	1.5
실업률 (%)		3.6	4.0	3.4	3.7	4.4	3.8	4.1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동행지수가 부정적 신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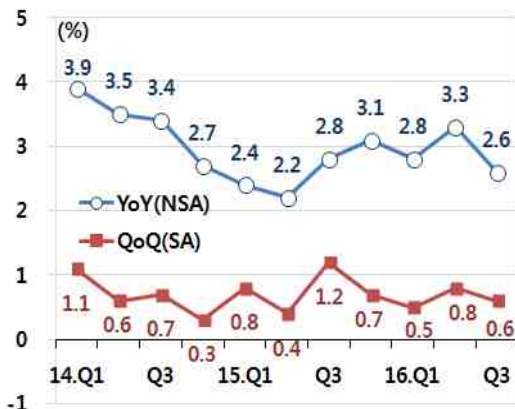
- 2016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 확대, 건설업의 절대적 성장 기여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비해 하락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에 0.6%를 기록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2.8%, 2분기 3.3%, 3분기에 2.6%를 기록

- 동행지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행지표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회복을 예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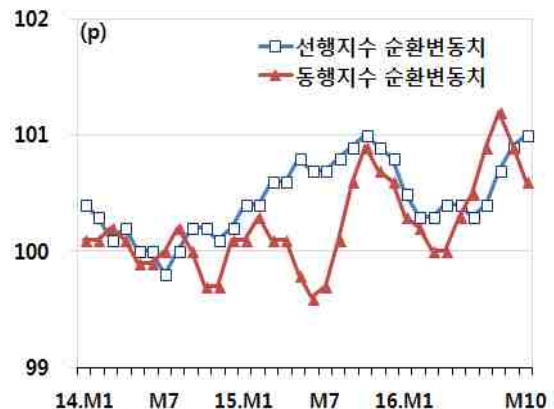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시현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100.9p, 8월 101.2p, 9월 100.9p, 10월100.6p
- 다만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100.4p, 8월 100.7p, 9월 100.9p, 10월101.0p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 (소비 절벽 지속) 우려되었던 하반기 소비절벽이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소비 회복이 상당기간 제한될 우려가 존재

-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부문 전반이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가는 모습

· 10월 내구재 소비는 심리 침체와 구매력 위축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치는 모습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7월 4.4%, 8월 6.1%, 9월 0.6%, 10월 2.3%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7월 0.7%, 8월 6.2%, 9월 △3.0%, 10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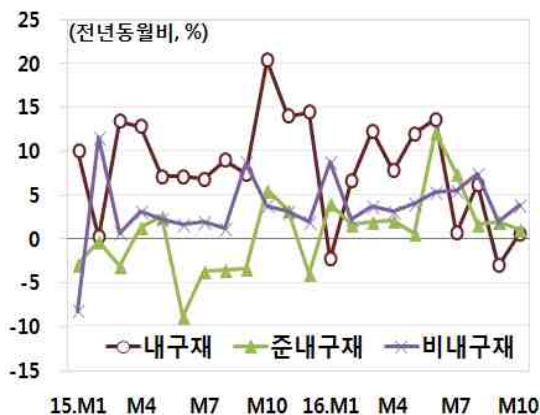
· 한편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10월 각각 1.1% 및 3.9%)

- 향후 소득 침체에 따른 구매력 급감,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부문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향후 소비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해 주는 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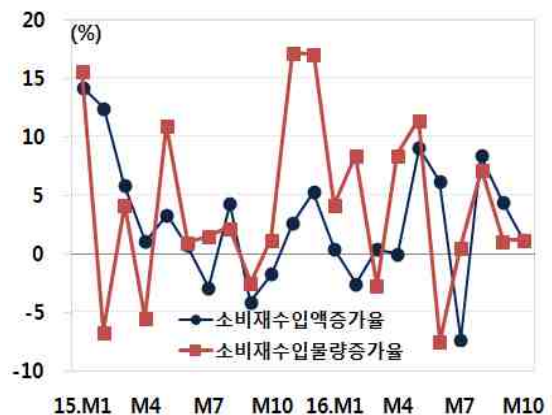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7월 △7.4%, 8월 8.3%, 9월 4.4%, 10월 1.2%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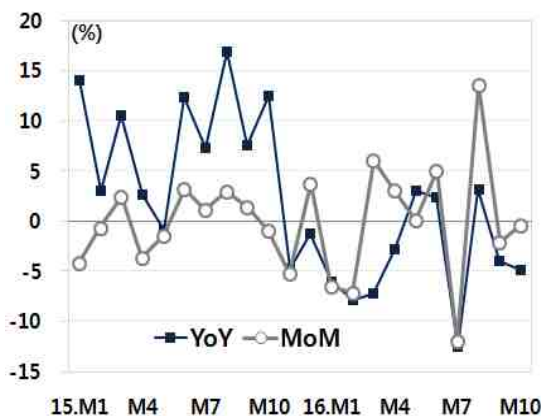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설비투자 장기 침체 우려) 시장수요 회복 지연에 산업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정치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침체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승

- 8월중 반등하던 설비투자가 9월과 10월에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시장수요 회복 지연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9월의 $\Delta 4.0\%$ 에 이어 10월에 $\Delta 4.9\%$ 로 침체 지속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7월 $\Delta 12.5\%$, 8월 3.1% , 9월 $\Delta 4.0\%$, 10월 $\Delta 4.9\%$
 - 또한 전기대비 기준 설비투자지수 증가율도 9월과 10월 각각 $\Delta 2.1\%$ 및 $\Delta 0.4\%$ 로 침체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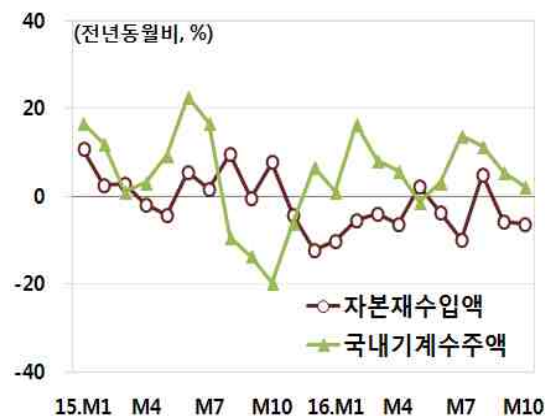
-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9월과 10월에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도 10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7월 $\Delta 9.9\%$, 8월 4.8% , 9월 $\Delta 5.7\%$, 10월 $\Delta 6.3\%$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 7월 5.9% , 8월 $\Delta 0.2\%$, 9월 10.7% , 10월 $\Delta 3.5\%$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 경기후퇴 조짐) 현재까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주 활동이 둔화되는 조짐이 발견

- 건설투자는 여전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중

·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로 9월의 11.6%보다 상승 추세

※ 건설기성 증가율(YoY): 7월 21.2%, 8월 25.3%, 9월 11.6%, 10월 20.0%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10월중 28.2%의 증가율 기록하며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은 1.6% 증가에 그침

※ 공공건설기성증가율(YoY): 7월 △2.0%, 8월 5.7%, 9월 △9.4%, 10월 1.6%

※ 민간건설기성증가율(YoY): 7월 30.2%, 8월 33.2%, 9월 20.8%, 10월 28.2%

- 최근 건설수주액(선행지표) 상으로는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간 부문은 증가세가 약화될 신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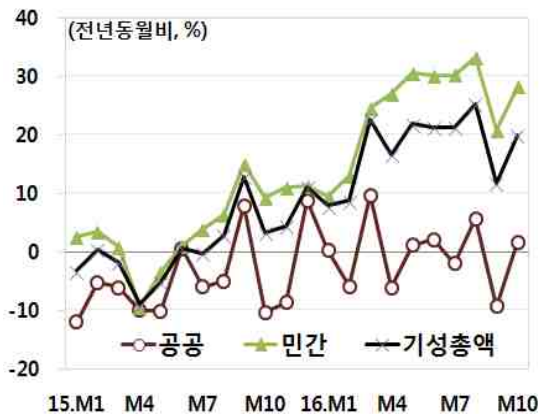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10월에 들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

※ 건설수주 증가율(YoY): 7월 44.5%, 8월 54.9%, 9월 △40.0%, 10월 41.2%

※ 공공건설수주증가율(YoY): 7월 77.0%, 8월 80.4%, 9월 62.1%, 10월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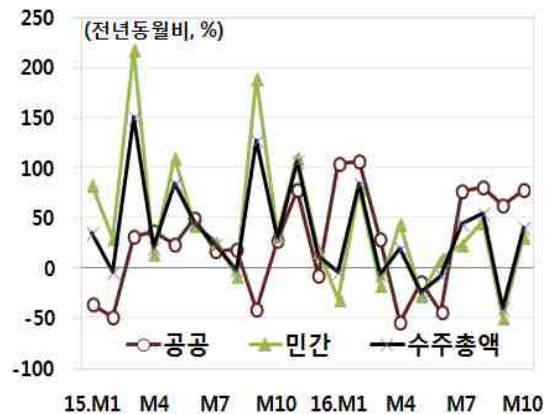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증가율(YoY): 7월 23.7%, 8월 46.8%, 9월 △48.2%, 10월 32.4%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수출 회복 가능성 증대)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감소폭이 축소되고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탈출

-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20개월 감소세를 보였으나(8월 제외)이었으나, 11월에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

· 최근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라 수출단가 감소폭이 축소되는 경향이 수출 증가세 전환의 원인으로 판단

※ 수출액 증가율: 8월 2.6%, 9월 Δ 5.9%, 10월 Δ 3.2%, 11월 2.7%

· 특히 해외수요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며 11월 수출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 11월 수출경기 반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수출물량 증가율: 8월 Δ 3.6%, 9월 Δ 0.2%, 10월 Δ 3.3%, 11월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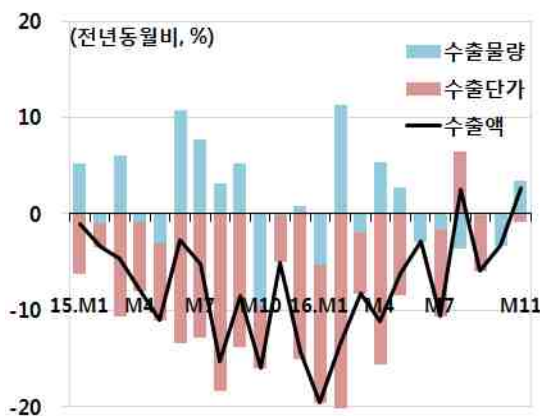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인 중국, 미국, ASEAN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회복 가능성이 상승

· 대 중국 수출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11월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

※ 대중 수출액 증가율: 8월 Δ 5.3%, 9월 Δ 9.0%, 10월 Δ 11.3%, 11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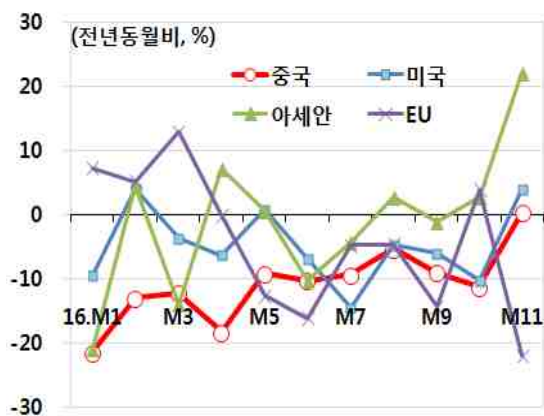
· 한편 11월중 대 아세안 수출은 22.0%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대 미국 수출도 3.9% 증가한 반면, 대 EU 수출은 Δ 22.0% 감소

<월별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위기의 시작) 외형상 고용지표는 안정되는 모습이나 질적인 지표가 향후 고용절벽을 예고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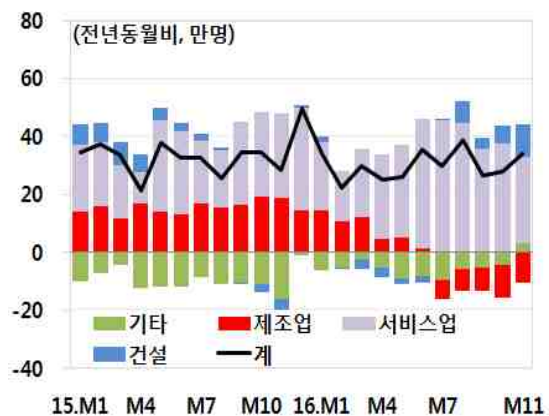
- 11월 실업률이 크게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에 위기 발생 가능성 증대¹⁾
 - 11월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 수준(60.8%)보다 상승
 - 그러나 11월 청년실업률 8.2%로 11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11월 취업자수가 다시 30만 명대로 상승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
 -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은 11월에 다시 30만 명대로 상승
 - 제조업의 취업자수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 감소 (2009년 8~9월 이후 최초)
 - ※ 취업자 증감(YoY): 7월 29.8만명, 8월 38.7만명, 9월 26.7만명, 10월 27.8만명, 11월 33.9만명
 - ※ 제조업 취업자 증감: 7월 △6.5만명, 8월 △7.4만명, 9월 △7.6만명, 10월 △11.5만명, 11월 △10.2만명
 - 한편 11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29.9만 명 증가, 건설업은 11.1만명 증가

<실업률 및 고용률(각 연도 11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1)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 추세보다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저물가 우려 감소)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0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안착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의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중

· 수입물가상승률은 그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어 10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Delta 0.6\%$ 를 기록

※ 수입물가 상승률(YoY): 7월 $\Delta 7.1\%$, 8월 $\Delta 8.4\%$, 9월 $\Delta 7.7\%$, 10월 $\Delta 0.6\%$, 11월 $\Delta 3.6\%$

·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연초 $\Delta 3\%$ 대에서 최근 0%에 근접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7월 $\Delta 2.5\%$, 8월 $\Delta 1.8\%$, 9월 $\Delta 1.1\%$, 10월 $\Delta 0.1\%$, 11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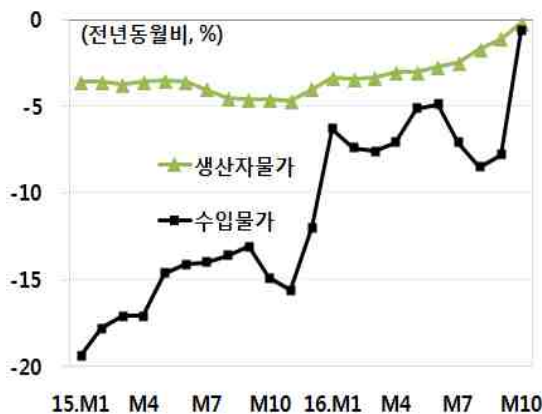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이후 최근까지 1%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는 모습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3%로 10월과 동일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8월 0.4%, 9월 1.2%, 10월 1.3%, 11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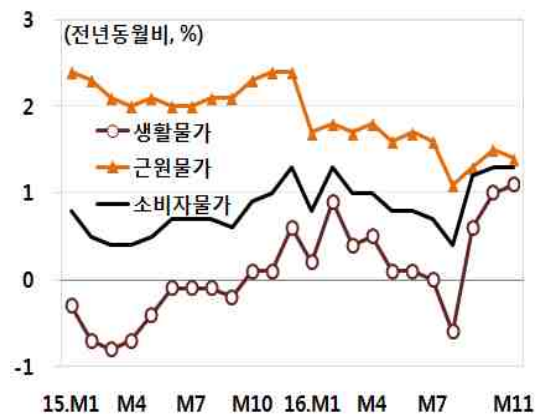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²⁾) 상승률은 11월 1.4%, 생활물가³⁾ 상승률은 1.1%를 기록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근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2) 소비자물가 품목중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3)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는 481개).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위축)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향후 소비 및 투자 침체 가능성이 증대

- 가계 구매력이 취약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

·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10월에 기준치 100p를 상회하였으나 11월에 들어 급락

※ 소비자심리지수: 7월 100.9p, 8월 101.8p, 9월 101.7p, 10월 101.9p, 11월 95.8p

· 11월 현재경기판단CSI도 60p로 10월의 72p에서 급락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도 같은 기간 80p에서 64p로 하락

- 기업의 경제심리도 4분기에 들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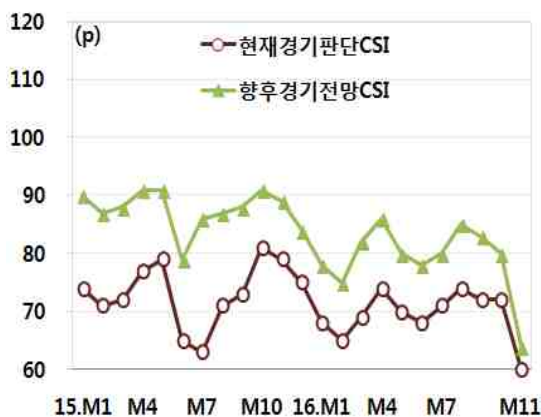
· 전경련BSI(전망)는 5월을 정점으로 하락 기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전경련BSI: 9월 95p, 10월 96p, 11월 89.8p, 12월 91.7p

· 한은BSI(업황전망)은 9월 이후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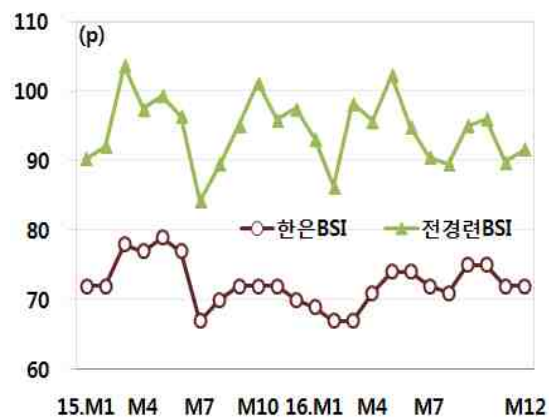
※ 한은BSI: 9월 75p, 10월 75p, 11월 72p, 12월 72p

<소비자심리지수(CCSI)>



자료 : 한국은행.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 대외 여건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과 미국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세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교역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로 3% 초중반으로 전망

- 미국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나 유로존 및 영국은 브렉시트의 여파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일본은 통화정책 효과의 한계로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구조조정의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의 견조한 성장세와 브라질과 러시아의 회복으로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보일 전망

- 세계 교역증가율은 향후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는 존재

<IMF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5년	2016년 (E)	2017년(E)		
			2016.10월 전망	2016.7월 전망	2016.4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2	3.1	3.4	3.4	3.5
선진국	2.1	1.6	1.8	1.8	2.0
미 국	2.6	1.6	2.2	2.5	2.5
유로지역	2.0	1.7	1.5	1.4	1.6
일 본	0.5	0.5	0.6	0.1	△0.1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0	4.2	4.6	4.6	4.6
중 국	6.9	6.6	6.2	6.2	6.2
인 도	7.6	7.6	7.6	7.4	7.5
브 라 질	△3.8	△3.3	0.5	0.5	0.0
러 시 아	△3.7	△0.8	1.1	1.0	0.8
세계 교역증가율	2.6	2.3	3.8	3.9	3.8

자료 : IMF.

○ (국제 유가) 세계 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OPEC의 감산 합의 등에 따르는 공급 감소 요인으로 원유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OPEC 회의에서 감산에 합의하면서 2017년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6년 11월 OPEC 회의에서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저유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원유 과잉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달러/배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WTI	48.8	39.8	46.5	43.1	49.0	52.3	50.7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6.12).

주 1) 2016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1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 (주요국 환율)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다른 주요국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전망

· 중국은 과도한 신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임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통화 환율 전망>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17(E)				2017(E)				2017(E)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평균	1.04	1.04	1.04	1.05	116.5	116.4	115.9	114.8	7.00	7.10	7.18	7.22
최고	1.08	1.09	1.12	1.14	122.0	122.0	124.0	126.0	7.15	7.30	7.47	7.65
최저	1.00	0.97	0.98	0.96	105.0	105.0	103.0	100.0	6.70	6.80	6.90	6.90

자료 : Bloomberg.

주 : 전망치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전망치를 발표한 투자은행의 전망치로 유로/달러는 18개, 엔/달러는 16개 위안/달러는 12개의 투자은행의 전망치 적용.

3. 2017년 수정 경제 전망

○ 수정 전망의 배경

- (예상치 못했던 정치 리스크 발생) 2016년 9월 전망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국내 정치 리스크 발생이 2017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 상반기의 정치 일정이 불확실해질 것으로 우려
 - 경제 정책 당국의 단기 및 장기적인 대응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 (내수의 회복 모멘텀 실종) 경제 주체의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 내수 경기를 지탱했던 건설경기 역시 둔화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 당시(2016년 9월)에는 국내 경제 주체의 심리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어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한 정치 리스크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심리의 악화 정도가 심함
 - 또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 중심의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그 동안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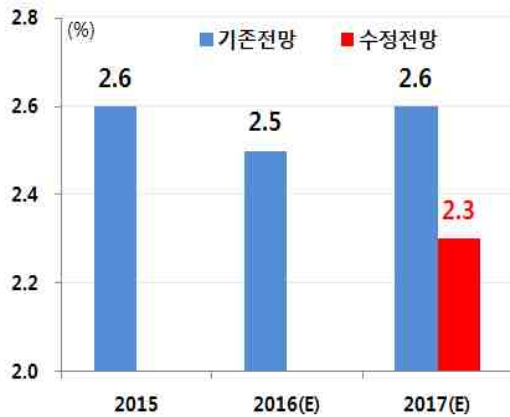
○ 수정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 및 내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은 2016년의 2.5%에서 2017년 2.3%로 더 하락할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기존 전망치(2016년 9월 전망) 2.6%에서 0.3%p 하향조정한 2.3%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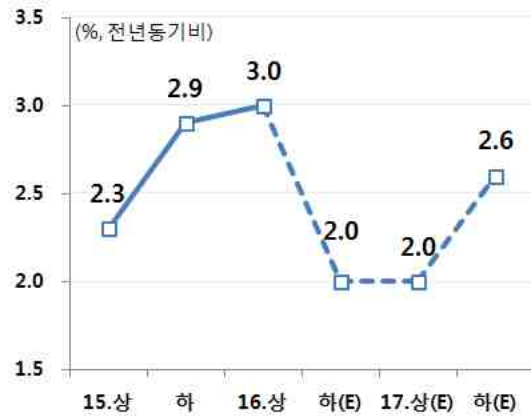
-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 리스크의 해소 여부에 따라 그 회복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2016.12)>

(연간 경제성장률)



(반기 경제성장률)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인구고령화 진전 및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을 위축시키는데 영향
- 기업 구조조정이 경기 후행지표인 임금과 고용⁴⁾에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	2.2	2.7	1.9	2.3	1.6	2.0	1.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4)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화하면 기업은 일차적으로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임금과 고용량을 조정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의 후행성이 나타남.

- (건설투자) 시장 안정화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SOC 부문 예산 축소에 따르는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되면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안정적 관리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착공된 물량으로 건설투자는 지속되겠지만 향후 신규 분양이 줄어들고, 2017년 SOC 부문 예산 축소⁵⁾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 모두 줄어들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	3.9	10.3	4.8	7.3	3.1	1.9	2.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투자 심리 개선이 제약되겠지만, 수출 확대에 의해 2017년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방향 여부, 브렉시트 절차에 따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이 경제주체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단기적인 미국 경제 회복,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르는 대외 수요 증가로 설비투자는 2016년보다 회복할 것으로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	5.3	△3.6	△1.5	△2.5	2.6	1.4	2.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5)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2016년 23.7조 원에서 2017년 23.1조 원으로 8.2%(1.9조 원) 감소.

- (수출) 2017년 수출증가율은 4.8%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감소에서 벗어날 전망
 - 수출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출물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높아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신흥국 디폴트 우려, Next Exit(영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EU 탈퇴 움직임)⁶⁾ 등의 불확실성이 수출경기 회복을 제약할 우려도 상존
- (수입) 2017년 수입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증가세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2017년 무역수지는 약 835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830억 달러 내외가 전망
 -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2016년보다 감소한 약 835억 달러 내외가 예상
 - 경상수지도 상품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16년보다 감소한 약 830억 달러 내외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대외거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1,059	517	433	950	420	410	830
무역수지(억 달러)	903	482	417	899	435	400	835
수출증가율 (%)	△ 8.0	△ 10.2	△ 1.7	△ 6.0	6.1	3.5	4.8
수입증가율 (%)	△ 16.9	△ 13.1	△ 1.0	△ 7.2	10.0	5.0	7.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6)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2월,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물가) 유가 상승 및 원화 약세로 2017년 물가 상승세 소폭 확대 전망

-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미국 및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2016년 대비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 역시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다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⁷⁾, 국내 수요 부진 확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는 주택시장 경기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2017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5%, 하반기 1.4%, 연간 1.5%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9	0.8	0.9	1.5	1.4	1.5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산업구조조정 여파 및 경기 부진세 지속으로 2017년 고용 여건은 지속적인 악화 전망

-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예상
-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여파가 산업연관 경로를 통해 서비스업 부문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역시 자영업 계층의 고용 여력을 제한
-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우려
- 2017년 실업률은 상반기 4.4%, 하반기 3.8%, 연간 4.1%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	3.6	4.0	3.4	3.7	4.4	3.8	4.1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7) 산유국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표 (2016.12)>

구 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6	3.0	2.0	2.5	2.0 (2.4)	2.6 (2.8)	2.3 (2.6)
	민간소비 (%)	2.2	2.7	1.9	2.3	1.6 (1.7)	2.0 (2.3)	1.8 (2.0)
	건설투자 (%)	3.9	10.3	4.8	7.3	3.1 (3.0)	1.9 (4.6)	2.5 (3.9)
	설비투자 (%)	5.3	△3.6	△1.5	△2.5	2.6 (2.6)	1.4 (1.4)	2.0 (2.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59	517	433	950	420 (430)	410 (460)	830 (890)
	무역수지 (억 달러)	903	482	417	899	435 (455)	400 (405)	835 (860)
	수출증가율 (%)	△8.0	△10.2	△1.7	△6.0	6.1 (5.8)	3.5 (2.0)	4.8 (3.8)
	수입증가율 (%)	△16.9	△13.1	△1.0	△7.2	10.0 (9.0)	5.0 (5.3)	7.4 (7.0)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9	0.8	0.9	1.5 (1.3)	1.4 (1.4)	1.5 (1.4)
실업률 (%)		3.6	4.0	3.4	3.7	4.4 (4.2)	3.8 (3.6)	4.1 (3.9)

주 : 괄호()안은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9월 당시 2017년 전망치.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시사점

-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2017년은 수출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르는 심리 위축으로 실제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회복 여부는 오로지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2) 대응 방안

-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② 거시경제정책의 적응적 대응 기초, ③ 적재적소적 내수 진작 노력, ④ 서민생활 안정 노력, ⑤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⑥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⑦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이 필요함

첫째,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추진력 취약성과 민간의 소극적 협력 등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의 경제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들에 대해 이행상황 파악, 성과 및 문제점 분석, 대안 개발 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임
- 새 정부의 경제팀은 갑작스러운 정권교체,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집권 후 당분간은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둘째, 거시 경제정책은 선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가는 적응적 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

- 경제상황에 대한 선부른 예단을 가지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기조보다는, 경제의 침체 또는 회복 강도를 살펴 경기의 흐름에 부합되는 적응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정책은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수준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며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기재부는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정책 기조를 밝힌 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됨
 - 다만 조기집행을 상반기중에서도 1분기로 집중하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한편 추경예산 편성은 ① 본예산이 이제 막 시행되고, ②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③ 정권교체기의 추경편성과정에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경편성은 국내 경제상황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진작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준금리 인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과도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경기 상황, 가계 부채의 증가세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하여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기팅과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 규모 자체가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유도 등으로 소비회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소비성향은 높으나 소비여력이 적고 소비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취약계층을 타기팅으로 하는 것은 소비 진작책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소비 진작책의 수단으로써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업들도 경영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주력해야 하나 기업의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정치권이 한국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제의 중요한 생산 주체인 대기업을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생산, 투자,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불황이 장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넷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차단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향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내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저성장(고실업)·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서민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

-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담합과 사재기 감시, 생필품 수입 규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잉여가 제약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정 생필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공공요금은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특히 향후 내수 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업 대란이 우려되는 바,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 강화, 잡세어링 확산, 기업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 정책이 시급하다.

- 최근 세계경제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수출 진흥과 통상마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선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대외 수요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펀더멘틀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인정 문제를 둘러싼 G2간 갈등, 미국 신행

정부의 보호무역주의화 등으로 한국에서의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

- 향후 예상되는 무역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미국, 중국 정부와의 통상 외교 채널을 보다 강화할 필요

여섯째,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 2017년 글로벌 경제간 디커플링, 유로존의 Next Exit(영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탈퇴 움직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디폴트 우려 등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금리, 환율 및 주가의 급변동으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국내 외환, 주식,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시장 투기 세력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특히 수출 환경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환율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일곱째,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에 대해 상충관계에 있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정책

적 비중을 결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분배를 통한 성장'과 '先성장 後분배'와 같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혹적인 논리는 지양되어야 하며, 성장과 분배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한편 정치권 경제 관련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회단체, 언론,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검증 노력을 통해 포퓰리즘이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특히 거의 6년째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2%대의 장기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 대립을 넘어서는 가치중립적인 성장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새로운 신성장 분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보다 먼저 현재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됨 **HRI**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연구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대외여건】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소비】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투자】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대외거래】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물가】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고용】	조규립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